

남북 통신선 재가동에도... '관계복원' 까진 첩첩산중

55일 만인 4일 통신선 복원... 정기통화 이어갈 듯
北, 응답했지만 "중대 과제 해결 노력" 떠넘겨
南 통해 美적대정책 철회 모색... 한미 이견 노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끊어버린 남북 통신연락선이 55일 만에 재가동됐지만 남북·북미 관계 복원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4일 오전 9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통신선을 복원한 데 따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통신선을 통한 통화도 이뤄졌다. 앞으로 남북은 전처럼 매일 오전 9시, 오후 5시 정기통화를 하고 사안 발생 시 수시로 통화할 예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통신선 복원 의사를 밝힌 지 닷새 만에 이뤄진 진전이다.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둘러싼 기

대감이 나오지만 통신선 재가동만으로 낙관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복원 결정을 알리면서 남측이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서 선결돼야 할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중대과제는 최근 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요구해온 적대시 정책 및 이종기준 철회를 뜻한다고 해석된다.
이는 사실상 한미 연합훈련 중단, 신무기 도입 중단, 북한 국방력 강화에 대한 비난 중단, 유엔 대북 제재안

화 등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하나 같이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남한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미사일을 쏘는 흐름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 대화 중에도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이종진대 철회를 요구하면 도발의 일상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9월에만 4차례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도 대화와 연결을 통해서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등을 띄웠다.
북한은 지난달 11~12일 순량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다.
25일 김 부부장은 대화를 통해 종전선언, 남북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더니 28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튿날 김 위원장은 시정

연설에서 연락선 복원을 예고했다. 그 다음날인 30일에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대남 온건 메시지와 국방력 강화는 별개라는 기조로,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한층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측의 이종기준 철회 요구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애초에 적대적 의도란 게 없다는 미국 측 입장과 같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북한에 인센티브(유인책)를 제공하자는 주장을 이어갔다.
정 장관은 국정감사 및 시간 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면 협상에

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지난달 미국외교협회(CFR) 대담 발언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방점을 찍고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 진전 없이는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2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정 장관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으로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1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비공개 긴

급회의를 소집했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공동성명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은 3일 담화에서 미국 등의 요청으로 개최된 이 회의를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고 난폭한 침해며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로 규정했다.
일각에서는 북미 간 교착이 길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남한을 고리로 적대시 정책 철회를 포함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타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시작되고, 이를 진전 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대장동 의혹에도 이재명 28.3%...尹 28.0% 洪 16.7% 'KSOI'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에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상대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 지사 28.3%, 윤석열 전 검찰총장 28.0%,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16.7%,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1.9%로 나타났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장

관 2.3%, 유승민 전 의원 2.0%, 최재형 전 감사원장 1.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7%, 심상정 정의당 의원 1.3%, 박용진 민주당 의원 0.9% 순이었다.
이 지사는 지난주보다 1.7%포인트 내렸고, 윤 전 총장은 0.9%포인트 올랐다. 양강 주자의 격차는 불과 0.3%포인트로 초박빙이었다.
홍 의원은 전주 대비 0.1%포인트 상승했고, 이 전 대표는 0.6%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중위권 경쟁을 이어갔다. 범진보권 차기 주자 적합도에서는

진보, 이재명 31.9% 이낙연 22.2%...격차 9.7%p
보수, 윤석열 29.6% 홍준표 29.8%...0.2%p 접전

이 지사가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내린 31.9%, 이 전 대표는 0.3%포인트 하락한 22.2%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9.7%포인트였다. 이어 박용진 의원 7.1%, 심상정 의원 3.9%, 추 장관 3.6%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이 지사는 지난주보다 0.4%포인트 내렸고, 이 전 대표는 1.6%포인트 올랐지만 60.4%대 28.8%로 더블스코어 이상 격차가 유지됐다. 오는 10일 민주당 지역 순회경선 마지막 지역인 서울에서는 이 지사 28.4%, 이 전 대표 25.7%로 나타났다.
범보수권 차기 주자 적합도에서는 홍 의원이 전주보다 0.3%포인트 오른 29.8%, 윤 전 총장이 0.1%포인트 내린 29.6%를 기록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조접전을 벌였다. 홍 의원과 윤

전 총장은 지난 8월 마지막주 조사 이후 6주째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11.2%), 안철수 대표(3.0%), 최 전 원장(2.6%), 황교안 전 총리(2.3%), 원희룡 전 제주지사(2.2%), 하태경 의원(1.7%), 김동연 전 부총리(1.6%), 안상수 전 인천시장(0.6%)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4%, 민주당 29.8%, 국민의당 7.2%, 열린민주당 6.2%, 정의당 4.1%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3%, 지지 정당 없음은 11.5%로 조사됐다. 지난주보다 국민의힘은 1.0%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1.5%포인트 내려 양당 간 격차는 5.1%포인트에서 7.6%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는 양당 간 격차가 최대치를 기록한 9월 셋째주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격차다. 서선욱기자

전후관예우 방지 위해 가인

김병로 회동 훈시 새겨야

최근 화천대우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 논란과 관련하여 법관의 성찰과 청렴한 몸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인 김병로의 원칙과 철학을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최근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병로 대법원장의 취임사에 나온 "법관의 엄정한 독립성과 어떠한 정실이 침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의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법관만큼은 정의를 최후까지 사수해야 한다" "사법 기관으로서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한다" 는 훈시를 인용하였다. 이어서 소 의원은 "지금 대법원장

이나 대법관들이 후배 법관들에게 가인 김병로 선생님과 같이 수선에 관한 훈시를 할 자신이 있는지"질의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제가 인적으로 가인 김병로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드높은 청렴성에 비교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소 의원은 최근 화천대우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적과 관련하여, 권 전 대법관이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국민의 날카로운 비판을 의식하고 그런 비난을 받을 일도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퇴임 후에는 "사내번호사로 일하게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전직 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